

기업애로 해소

01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02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합리화로 곤충산업 진입장벽 완화

03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

04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05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세부 운영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06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

07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08 숲속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추진부서 안양시 정책기획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소각 위주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의 치명적 문제점
 - 고령화로 폭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 14곳 뿐임.
 - 결국 의료폐기물이 2차 감염 위험을 신고 소각장을 찾아 장거리 이동하게 되고, 소각장의 독점적 구조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급증하게 됨. 또한 소각 방식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최적의 해결책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하여 부피를 대폭 줄여서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시설
 - 안전성(병원에서 바로 멸균처리로 감염 위험 예방), 경제성(처리단가가 낮은 일반폐기물로 배출), 친환경성(非소각방식)으로 선진국 등에서 이미 세계적 추세임.
- 그러나,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막는 중첩규제
 - ① 교육환경법 규제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내) 폐기물시설 금지 규정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사실상 거의 차단되었음.
 - ② 건축용도 제한 규제
 - 불명확한 ‘병원의 부속시설’ 해석 기준으로, 멸균분쇄시설을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닌 별도의 폐기물시설로 해석할 때 건축 용도제한*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

* 건축 용도제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주거, 상업 등)에 따라 특정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

 - 즉, 지자체별 건축허가 담당자가 ‘멸균분쇄시설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해석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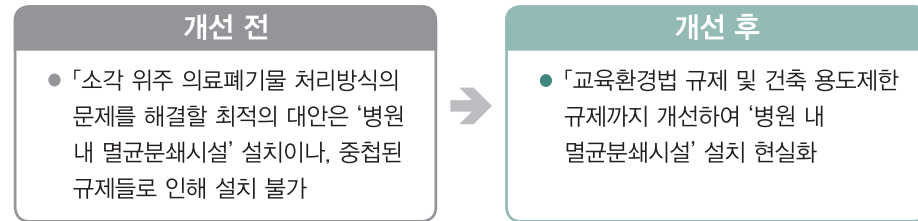
※ 관련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멸균분쇄시설 처리방식(예)



개선내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신설로 교육환경법 규제 개선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적 유권해석 도출로 건축 용도제한 규제 개선
 - 「멸균분쇄시설은 병원의 부속시설로서, 건축용도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19. 10.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교육환경법 규제 발굴
- '19. 12. ~20. 0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실패), 경기도 시군순회간담회 안건 상정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10회
- '20. 09.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신설
 - ☞ 교육환경법 규제 개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 '21. 0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건축 용도제한 규제 발굴
- '21. 03. ~21. 07. 경기도 시군순회간담회 건의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40회
- '21. 08.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출
 -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 가능」
- '21. 08. ~22. 03. 국무조정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중앙 건의 및 현장 소통 44회
- '22. 03.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 '22. 04.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도출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을 「의료법」상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
 - ☞ 건축 용도제한 규제 개선(건축 용도제한 없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개선효과



- (국민의 안전·생명 보호)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여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연 1,685억원(추산) 절감으로 의료보험 수가 합리화 기대
- (탄소배출량 80% 감소) 소각 위주 방식의 문제 해결로 탄소중립 대응
-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 해결
- 고령화와 신종감염병 등 미래 시대의 위기 대응, 바이오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2021. 06. 경기도 시군순회간담회



2021. 11.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개선과제 현장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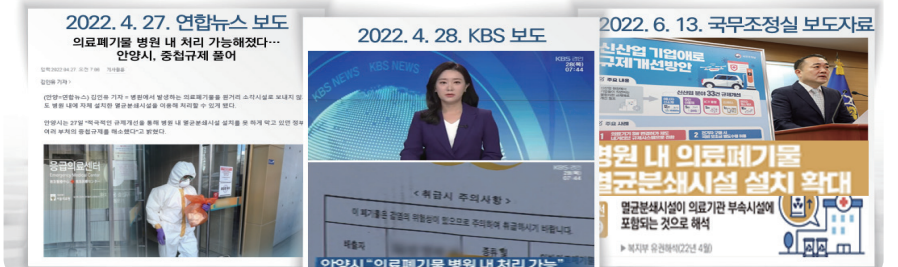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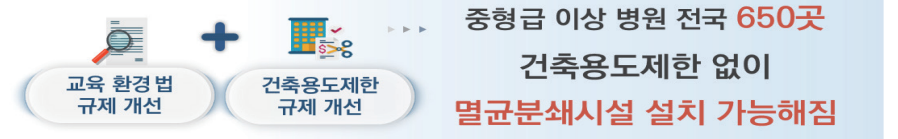
2022. 3.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추진과정



2년 5개월 만에 중첩규제까지 해결



세상을 바꾸는 규제혁신, 안양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안양시 정책기획과 권구현 031-8045-2211

안양시의 2년 5개월간의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시는 2019년 멸균분쇄시설 관련 교육환경법 규제 발굴 후 관련 기업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도전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의 노력 끝에 2020년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뿌듯함도 잠시, 2021년 더 큰 장벽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건축 용도제한 규제'였습니다.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건축허가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건축 용도제한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역시 수용불가 답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다수 부처가 얹혀 있는 '덩어리 규제'의 특성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가리지 않고 전국과 소통했습니다. 각지의 다양한 기업,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무작정 연락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갔습니다. 소관부처를 직접 설득하기도 하고, 새로운 규제개선 논리를 3차에 걸쳐 개발하는 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간담회」는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규제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전의 과정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지고, 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얻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안양시의 2년 5개월의 도전은 중첩 규제 해결로 이어졌고, 이제 전국 병원에서 건축용도 제한 없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보험 등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양시는 이제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와는 차원이 다른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추진 동력을 지원해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규제개혁을 직접 추진하느라 늘상 바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을 비롯하여, 적극행정·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전 직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국무조정실 등과의 소통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규제혁신, 안양시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02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합리화로 곤충산업 진입장벽 완화

추진부서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031-770-2652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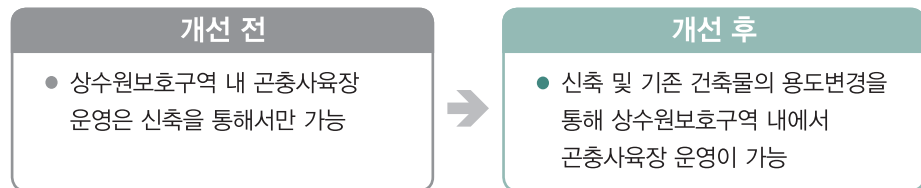


- 곤충산업은 식품, 화장품, 애완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년 꾸준히 성장 중이며, 이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가능하지만, 신축 가능한 시설 간의 상호 용도변경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

[피해사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창고)을 활용하여 곤충사육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곤충사육장은 신축을 통한 허가만이 가능하며, 해당부지에 곤충사육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 시설물 철거 및 시설 신축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발생

※ 관련규정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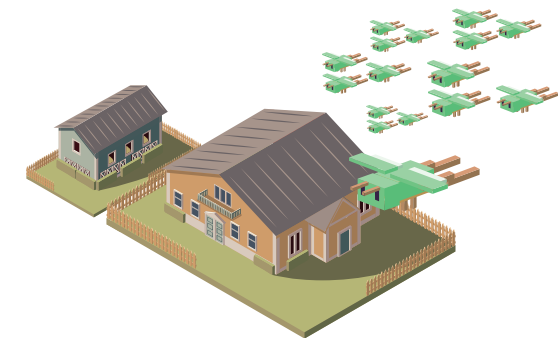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곤충사육장 운영이 가능해짐



- '17. 03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규제개선 건의
- '18. 03. 환경부 수용 곤란 회신
- '18. 06. 상급기관 협의 및 규제현장 방문
- '18. 06.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회의
- '18. 10. 규제신문고과 회의
- '19. 08.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 '20. 12.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1. 10.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 '22. 07.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창고 1동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 완료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945호, 2021. 10. 20.)]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략) 4.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략) 4.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곤충사육장 운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절감으로 곤충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곤충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기반 제시



규제현장 및 곤충사육 농가 방문 (2018. 6.)



규제신문고과 환경부 회의 참석(2018. 10.)



규제합리화로 곤충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다.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이명구 031-770-2652

상수원보호구역 내 곤충사육장 용도변경 범위 확대가 규제합리화라는 결실을 이루고, 그것이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에 수록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양평군은 수도권 규제, 팔당 유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민원인께서 인근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곤충사육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곤충사육장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나, 곤충사육장은 신축은 가능하나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시설물로 규정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 기관과의 협의, 현장 방문 및 논리 개발 등 오랜 기간, 여러 담당자를 거쳐서 4년 7개월여 만에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나 환경 관련 규제는 풀기 어렵다.’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공통적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규제 중에는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한 규제는 담당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해소된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았으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민원인께서 찾아오셔서 이제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며 웃으시던 모습에서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이유를 체감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3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

추진부서 광명시 기후에너지과 ☎ 02-2680-6455

개선배경



- 친환경차의 보급확대와 수요증가에 따른 인프라 기반시설 건립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에 인하여 친환경 수소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어려움
 - 정부 정책 및 시민 누구나 필요한 공익사업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과도한 부과로 인하여 필수 인프라 구축 저해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전기차충전소 구축은 가능하나, 「건축법」상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 허가기준이 없어 수소차충전소와 전기차충전소를 복합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
- ※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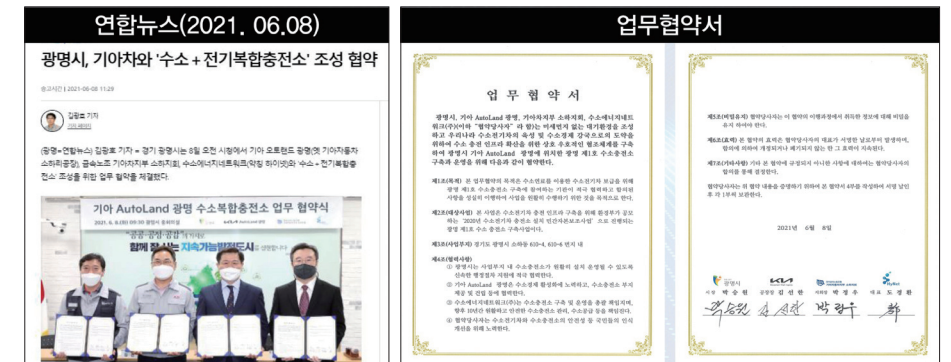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에 인하여 친환경 수소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어려움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시 개발부담금, 보전부담금 등 각종 행위에 따른 부담금으로 인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하거나, 사업추진 부담을 가중 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개별법령에 따른 부서별 협의를 통한 각종 부담금 부과 관련 법 개정 및 행정규제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개정('21.05.04.)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충전소 건축행위 근거 마련으로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충전소를 복합으로 구축 가능 ● 보편적 에너지복지에 필요한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광명시의 행정지원, 기아차 부지제공 및 전기차충전소 설치·운영, 하이넷 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전기차충전소의 구축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차목 신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9. 04. 18. 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방안제시(광명시 → 기아)
- '19. 05. 30. 광명시, 기아차, 하이넷 3자 간 충전소 건립 협력 협의
- '20. 02. 27. 수소충전소 설치업무 협약서 체결(기아 ↔ 하이넷)
- '20. 04. 07. 2020년 환경부 수소충전소 공모 선정(국비 15억 확보)
- '21. 03. 30. 수소복합충전소 실시설계 완료
- '21. 05. 19.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소 설치 근거 마련
- '21. 05. 2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
- '21. 06. 08. 광명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사업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 기아(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기아차노조
- '21. 09. 0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21. 09. 13.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고수리(광명시)
- '22. 05. 04. 기아 AutoLand 광명 수소복합충전소 상용운전 개시

개선효과



- 인프라 구축 파급
 -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복합충전소 구축 사례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의 학습 및 파급효과
- 보편적 에너지 보급
 -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하여 수도권 서남부 수소차 충전을 담당하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구현
- 민·관 협력 모델
 -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제시 및 협업을 통한 선제적 행정사례 제시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충전소' 개소

광명 오토랜드에 수소충전 1기·전기충전 6기 설치
하이넷, 환경부 지원받아 연내 수소충전기 1기 증설

최인영 기자 2022.05.04 13:10:00 수정 2022.05.06 07:52:41 1528호

하이넷 광명 소하 수소충전소

[가스신문 = 최인영 기자] 수소충전기와 초고속 전기충전기를 갖춘 복합충전소가 경기도 광명에서 상업충전을 시작했다.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에서 문을 연 것이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하이넷이 준공한 27번째 수소충전소인 하이넷 광명 소하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수소·전기충전기를 설치했다. 4,381㎡ 부지에 하이넷 수소충전기 1기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E-pit) 전기충전기 6기를 갖추고 있다.

하루 최대 60대의 수소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260kw 초고속 충전기 4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기를 설치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적용해 친환경 복합충전소를 구현하고 있다.

앞서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시운전을 하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첫 사례로서 지난해 6월 기아, 광명시, 하이넷이 업무협약을 통해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72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04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부서 경기도 수질정책과 ☎ 031-8008-6922

개선배경



-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로 인하여 규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주거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또한, 규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개별처리·방류로 폐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수질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수 : 2010년 8,210개소 → 2019년 11,977개소 (연평균 377개소 증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목재 및 폐의류 재활용시설 입지불가 ●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가구공장 잉여자재(폐목재) 및 폐의류 재활용시설 일부 입지허용 ● 주거지역 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시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일정부분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조건부 허용

→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을 통해 폐수발생이 없는 폐목재·폐의류 재활용시설에 대해 일부 입지를 허용하고,
- 주거지역 내 난립한 소규모 공장 집적화를 위해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의 일정비율(최대 50%)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



- '19. 10. 道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수립
- '19. 11. 팔당 특별대책지역 규제합리화 T/F 회의 추진
~ '20. 05.
- '20. 06. 30.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 마련 및 환경부 건의
- '20. 07. 관계기관 회의 및 국회 방문 협조 추진
~ '22. 02.
- '22. 02. 10. 특별대책지역 고시 행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
- '22. 05. 03.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개정 완료

개선효과



- 개별공장 재배치 ·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폐수관리(공공처리)와 엄격한 기준 적용(BOD 40mg/L → 10mg/L)을 통한 상수원 안전성 확보

(단위 : mg/L)

구 분	개별처리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공공폐수처리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I	II	III	IV
BOD	40	80	120	30	10	10	10	10
TOC	30	50	75	25	15(25)	15(25)	25	25
SS	40	80	120	30	10	10	10	10
T-N	30	60	60	60	20	20	20	20
T-P	4	8	8	8	0.2	0.3	0.5	2

- 주거지역 내 난립한 공장을 이전하여 계획입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폐수 발생 우려가 없는 일부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허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05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세부 운영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 031-8008-5564

개선배경



-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제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됨.
- 다만, 해당 사항의 운영을 위하여 공사계약의 신규 및 변경 계약 체결 시 발주청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미반영 시 산출내역서의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발생함.

[사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율로 작성되는 사항으로 발주청에서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임의로 반영하는 경우 재료비 또는 경비 단가를 하향시키거나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등의 제경비를 하향시켜야 하는바 설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 「특수조건」 세부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소지를 제거

개선내용



개선 전

- 계약(변경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체결 단계에서 발주청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 미반영 시 반영을 요구



개선 후

-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 항목을 삭제하고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신설)' 징구 및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공사'임을 사전 안내 후 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특수조건」의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함.



- '22. 01. 15. 경기도에 1차 공무원 제안
 - 「특수조건」 세부 운영 내 계약상대자의 권리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제안
- '22. 02. 16. 경기도 제안 불채택
 - 적정임금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 불채택
- '22. 04. 05. 경기도에 2차 공무원 제안
 -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에 대한 불합리성에 따른 개선 제안
- '22. 06. 15. 경기도 제안 채택
- '22. 06. 17. 「특수조건」 세부 운영 사항 변경 실시
 -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관여 우려 사항 삭제 및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신설

개선효과



- 법령 및 기준의 규정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특수조건」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대한 이행 확약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수조건」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06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8

개선배경



-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 이내로 제한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신증설 면적 제한 없음(산집법 시행령 별표3)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아 취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공장 신증설면적 1천㎡ 이내로 제한
 -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사 례] 여주시 소재 T사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 ·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필요한 만큼의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증설이 가능

개선내용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이라도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하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신 · 증설 면적 확대(1천㎡→2천㎡ / 산업통산자원부)
 - 규제개혁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공장 신 · 증설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를 추진

개선 전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1천㎡ 이내로 신증설 면적 제한



개선 후

-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공장이 폐수의 전량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배출이 없으면 공장 신 · 증설면적 2천㎡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개정 예정('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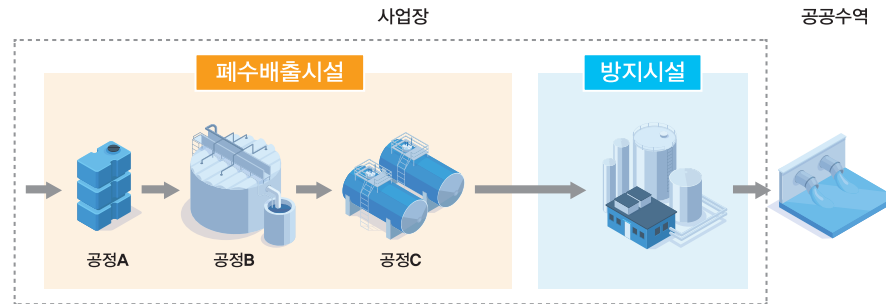
- '20. 08.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관련 건의(규제개혁신문고)
- '22. 07.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브리핑(산업통상자원부)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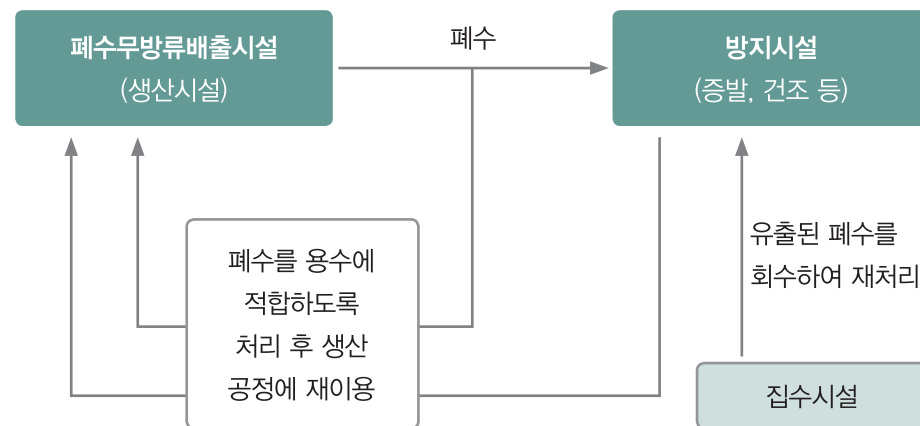


-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 및 경제발전 환경 개선

[폐수배출시설의 개념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념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07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8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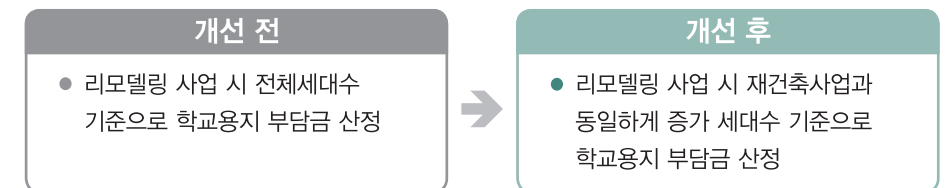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대수선 및 증축 등을 통해 주거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 리모델링 사업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증가세대수·증축면적기준이 아닌 전체세대수·전체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
※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재건축사업은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개선내용



-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현재 학교용지법에 따라 전체 세대수로 산정하나,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하는 세대수를 산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건의를 수용함(교육부)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개정 예정('23년)



- '22. 04. 도-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
- '22. 05. 간담회 발췌과제 보완 및 중앙 건의
- '22. 06.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 수용 회신(교육부)

개선효과



- 사업성격이 유사한(노후주택 개선)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경제적 비용 절감

08 숲속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108

개선배경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시 실질 개발면적이 기준이나, 유사 성격의 숲속야영장은 전체 구역면적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사 례] 경기도 **시에서는 2020년 **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개발되는 면적 6,000㎡이 아닌 전체 구역면적 50,000㎡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개선내용



- 숲속야영장에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 규모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설치운영되어 환경훼손이 우려되나, 산림생태계, 빛·소음 공해, 수질, 폐기물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조정 검토(환경부)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목원조성,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추가 (전체 사업부지 면적 → 실질 개발면적)

* (시행일자) '22.9.14., 법령개정전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 '22. 02. 지역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자체 건의과제 발굴
- '22. 03. 지자체 건의 및 테마과제 보완 및 중앙부처 제출
- '22. 05. 중앙부처 협의결과 수용 회신(환경부)

개선효과



- 당초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서 여가 레저의 활성화로 개별적인 시설로도 조성될 수 있게 법제화된 것으로 유사 휴양시설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림 여가 활동 보장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